총선 이끌 원내대표 누구… 여야 경선 '관심 집중'

국힘, 주호영 임기 '4초' 가닥…김학용·박대출·윤재옥 출마 결심
민주, 5월 의총서 선출…안규백·김경협·전해철·박광온 등 거론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세 번째)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왼쪽 두 번째)등 참석자들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 앞서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여야의 원내대표 경선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 설왕설래를 거듭한 주호영 현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말'보다 당겨진 '4월 초'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여서다.

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당초 예상했던 4월7일 이내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현재 김학용(4선) 의원과 박대출·윤재옥(이상 3선) 의원이 출마를 결심하고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당내에 몇 명 안 되는 '수도권 중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의원의 경우 '대야 선명성'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윤 의원은 후보군 가운데 친윤(친윤석열) 색채가 가장 짙은 인사로 평가된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서 표면적으로 거론되는 변수는 김기현 당 대표가 PK(부산·울산·경남) 출신이라는 점이다.

당내에선 내년 4월 총선을 대비한 확장성 차원에서 수도권 출신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러한 지역안배론은 '여의도 정가'에서만 통용되는 정치공학적 논리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김 의원은 경기 안성이 지역구이고, 박 의원(경남 진주갑)과 윤 의원(대구 달서을)은 영남 출신이다. 그러나 출신 지역 말고도 변수는 훨씬 다층적으로 얽혀 있다.

우선 친윤 진영이 당 지도부를 장악한 상황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 대표에 원내대표까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해 '단일대오' 지도부를 완성해야 한다는 입장과, 원내 지도부만이라도 다양성을 담아내는 모양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친윤 주류와 가장 가까이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은 윤 의원이다. 그는 지난 대선 때 당 중앙선대본부 상황실장을 맡은 바 있다.

최근에는 후임 정책위의장 인선이 변수로 떠올랐다. 정책위의장 인선 시점 및 방향에 따라 원내대표 후보군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021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후보가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정책위의장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보통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 대표와 협의해 정책위의장을 선임해왔으나, 이번에는 원내대표보다 정책위의장을 먼저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이외에도 윤상현(4선), 김태호(3선) 의원 등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원내대표 도전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19일 민주당 관계자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은 이르면 3~4월에 앞당겨 치러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당헌 55조에는 '원내대표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고 규정됐다. 지난해 3월 대선 패배로 인한 지도부 총사퇴 직후 선출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는 5월 둘째주까지 임기를 마치면 후임 원내대표는 차기 총선과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29일까지 야당 원내지도부를 이끈다.

현재까지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지난해 원내대표 경선에서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안규백(4선) 의원과 김경협·전해철·박광온·이원욱(3선)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또 김두관·김민석·홍익표(3선)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日과 독도·위안부 논의 했는지 밝혀야"

민주 "'닉슨 사퇴' 원인은 거짓말…국민 앞에 진실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진실을 밝히라고 19일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은 회담 직후 (현지 언론에)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했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강변하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을 향해 "일본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왜 거짓말을 하냐고 항의하지 못하느냐"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일본이냐, 아니면 한국이냐"고 따져물었다.

임 대변인은 "미국 전 대통령인 리처드 닉슨이 자진사퇴한 결정적 원인은 거짓말이었다. 그만큼 정부 권력의 거짓말은 중대한 문제"라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은 '오너'인 국민 앞에 진실을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이 논란과 관련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설명을 언급하며 "기시다 총리의 해당 언급이 있었다는 말이냐.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맞받아 따지지 않고 침묵으로 넘겼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박 장관은 전날 KBS 9시 뉴스에 출연, 정상회담에서 "독도라든지 위안부 문제는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상회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남부 가뭄대책 내달 발표

국힘 지도부, 첫 고위당정협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국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원상 회복에 합의한 만큼, 양국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9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해부터 지속돼 온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 문제도 안건으로 올랐다.

당정은 항구적인 물관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보성강댐 다목적화 등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용수가 사용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함께 영산강·섬진강 유역에 대한 가뭄대비 중장기 계획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지방정가 라운지

광주 장애인 건강권 보장·의료접근성 향상

서용규 시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광주시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서용규(민주·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시행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장애인 보건의료센터의 지정·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치의 육성 및 교육훈련 지원, 지역 의사회와 각 의료기관 독려, 주치의 사업 홍보 등의 내용도 담겼다.

조례가 제정되면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가 확립되고, 장애인 보건관리 정책에 대한 광주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日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최정훈 도의원 대표 발의

최정훈(민주·목포 4) 전남도의원은 지난 16일 폐회한 전남도의회 제 369회 임시회에서 정부의 굴욕적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최 의원은 "정부의 '제 3자 변제'는 국제인권법의 대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 조치"라며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하기는 커녕, 현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는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